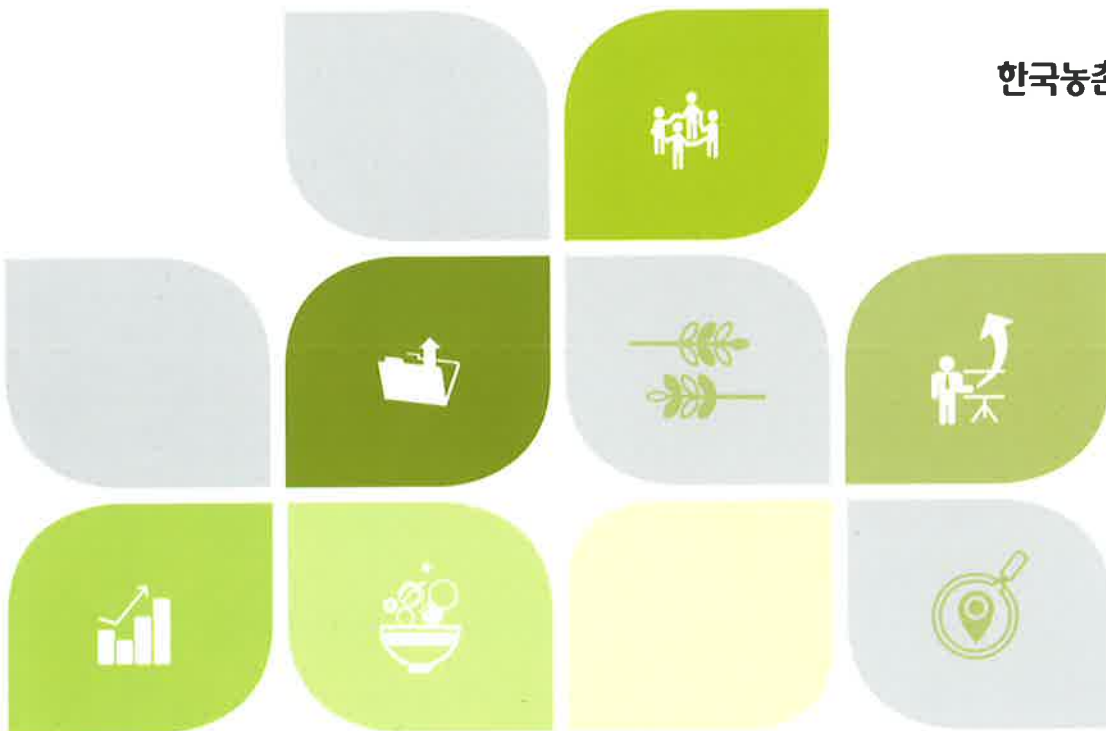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3-10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18년 주요 업무 내용 / 13

1. 정책 점검 · 평가 업무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17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분석	27
2. 조사 · 연구 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39
2.2. 삶의 질 심층연구	52
2.2.1.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53
2.2.2.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55
2.2.3.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	57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58



3. 기타 삶의 질 위원회 지원 업무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67
3.2. 정책 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71
3.3.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74
3.4.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75
3.5.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대응	79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¹⁾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이다.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²⁾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³⁾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1) 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 한다.
2)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한다.
3)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 2016. 1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11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최
- 2018.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의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정책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 모니터링으로 점검하고, 정책 성과의 확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심층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4년 11월 21일)

↳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5, 2016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 2016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2017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7개 부문) 실시
 -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2017 농어촌의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17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2018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18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기본계획’의 제5장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를 두고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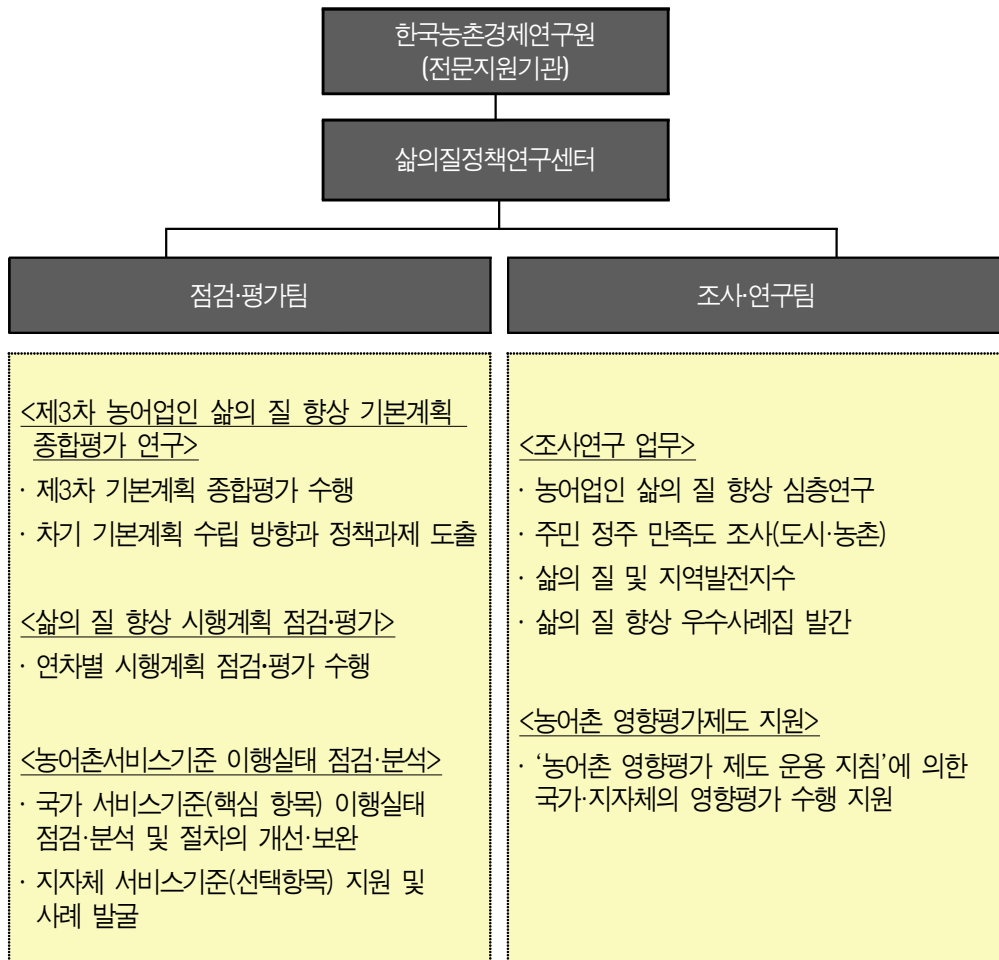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2018년도는 2019년이 기본계획 수립연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차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별 선택 항목의 제도화를 점검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

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인지적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삶의 질 이야기 포스터 발간 등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2015~2019)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농어촌 맞춤형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주체계별 기능을 강화한다.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삶의 질 정책 기조 변화>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 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 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 ▶ 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 비전 및 추진 기반

- (비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한다.**
- (추진 기반) 중앙정부는 부처 간 연계성을 높여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며, 현장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높인다.

▣ 부문별 목표

- 기본 비전의 설정에 맞춰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 2차 기본계획의 지역 역량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안전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 보건·복지

-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



CHAPTER

II



2018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 · 평가 업무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 개요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제3차 기본계획(2015-2019) 4년 차에 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정책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 제4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7대 부문별 추진실적, 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49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했던 7대 부문별로 3~4개의 정책군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
 - 정책군 단위별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 추가적으로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군별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 정책군 평가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삶의 질 관련 조사 연구 및 정부 부처 자료, 정책 수요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였다.

<정책군 평가 주요 활용 자료>

구분	평가 자료
정책 형성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목표, 성과지표, 추진체계
정책 집행	제3차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투융자 실적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
	삶의 질 시행계획 지역평가 결과 보고서
	삶의 질 시행계획 주요 사업별 현장 조사 보고서
정책 성과	삶의 질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농어촌 복지실태 조사 결과
	지역발전지수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
	기타 통계 자료



❖ 부문별 평가 주요 결과

□ 보건·복지 부문

- 제3차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부문 정책 목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이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③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④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선정하여 추진했다.
-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취약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어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
 - 지원 및 목표 대상 계층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조사 개선, 농업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 (의료서비스 확충) 농어촌에 특화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이 부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고, 관련 사업이 미흡하였다.
 -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해 부족한 의료 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에서 필수요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응급의료 현장 초동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 제고
- (대상별 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기초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 정량적 목표치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여성 농업인의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여성 친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어촌형 특수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특화 여성 친화 정책 개발

○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현재 국가 복지서비스의 2/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 예산과 수혜 대상자가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어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보건·복지 부문에서 제4차 기본계획에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복지 인권 서비스 강화’,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 교육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교육부분의 목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이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② 맞춤형 프로그램 및 주체 육성, ③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확대, ④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가 있었다.

○ (농어촌 공교육 서비스 확충) 제3차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학생 복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시도하였으나, 도농 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크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강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더불어 늘어나는 노인 문해 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전원학교 플러스(농산어촌형 혁신학교(초중학교) 사업 확대), 농어촌학생 기초학습 강화(방과후 공부방)

○ (교육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의 성과가 미흡했으며, 향후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하려면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주민의 평생학습과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의 서비스기준 세부 목표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지역 마을교사 육성, 농촌 유학 활성화



- (지역 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제 3차 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주민들은 성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협력을 위한 ‘지방 교육행정 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일반-교육행정 협치(광역 단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
- 교육 부문의 제4차 기본계획 기본방향으로 ‘교육 협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의 실현’을 제안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②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③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④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이 추진되었다.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들은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의 부재로 시·군 내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생활권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였다.
 -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공간 전략적 관점으로 효율적, 압축적, 입체적으로 농촌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적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형 스마트 타운 육성(시범사업), 스마트 빌리지 육성(시범사업)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생활용수 개발 등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률 및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사업과 신규 경제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사업 등을 구분하여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형 생활 SOC 확충사업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투입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실제 수혜 가구의 체감도 등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사용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농촌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관리체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해야 하며,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주택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형 제로에너지 코하우징 개발·보급사업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정책목표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6차산업화 기반 마련, ②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③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④ 농어촌 일자리 지원이 추진되었다.
- (6차산업 활성화) 주요 사업이 중앙정부 공모형태로 추진되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였다.
 - 6차산업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다기능 농업 관점에서 농촌교육, 사회적 농업 등으로 사업 내용을 다각화해야 한다.
- (농어촌 일자리 활성화) 인력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려면 부처 간 협력과 농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부처 간 협력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에 더해 농촌 활성화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문화·교육 등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영농작업단,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치유 농업 활성화,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경영체 및 지역 인턴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
- (농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와 정책 환류 등이 다소 미흡했으며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과 역할이 부족하였다.
 - 관광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여러 세부과제를 연계·패키지화하여 다년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적으로 제4차 기본계획에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과 제로 ‘농어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 문화·여가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 참여 여건 조성”이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②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③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④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이 있었다.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제3차 기본계획 동안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이 향상된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 고령화 심화, 열악한 문화 기반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 체계와 사업 내용, 성과목표 설정 등이 필요하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어촌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원 사업, 농어촌 문화·여가 이동권 보장 사업, 농어촌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문화 향유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나,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된 사업이 아니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
 - 문화소외지역 개선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며,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어촌 주민여행 활성화 지원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지역주민과 문화 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 관련 사업, 동호회 관련 사업이 없었다.
 - 기존에 조성된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원방식(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업 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시행된 사업은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실질적 정책수단(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농촌 주민만을 수혜자로 한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 지역의 전통·향토

문화 기반 생활문화 교육 활동을 늘려야 한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축제지원

○ 문화·여가 부문의 추가적인 정책 과제로 ‘농촌형 문화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환경·경관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는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으로 세 개의 정책군이 추진되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정량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이행률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적정성, 정책의 시행체계와 방법 등에서는 정책별로 격차가 있었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촌 경관 보호지구제도, 공익형 직불제,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경관 보호지구제도, 전통농업 경작유지 제도, 농어촌 생태관광 리모델링(재생사업) 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부 목표로 설정하기에 사업특성과 내용, 범위 등이 다소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유희화된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 환경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대책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축산분뇨 이외에 일반 관행농업이 초래하는 환경과 경관 훼손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 농업의 환경 및 경관보전 효과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개편, 환경친화형 축산업 지원 장려사업



□ 안전 부문

- 제3차 기본계획 안전 부문의 목표는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이었다.
 - 주요 정책군으로는 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②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③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되었다.
-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가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적인 자연재해(산사태, 태풍 등)에 국한되었다.
 - 기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미세먼지 등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종 재난과 관련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한파, 폭염, 가뭄 등 신종 재난 대응대책
- (안전한 영농·영어활동 기반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재해로 인한 농축산물 및 관련 시설 및 장비, 즉 물적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전에 국한되어 안전 부문의 사업으로 다소 적합하지 않았다.
 - 현재 보건·복지 부문에 속해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 등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사업들을 안전 부문에 포함하여 재분류해야 한다.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부분 사업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그쳤다.
 - 지능형 CCTV 구축, 위험도로 개선 등의 사업은 질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하드웨어 사업 외 생활 안전 지도, 지역 범죄 예방, 폭력 예방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 규명을 위한 장기 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과제

- 삶의 질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비율을 늘리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연중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고 시기별 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개편,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미달성 지역 등 삶의 질 여건이 열악한 낙후 지역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영향평가 평가 주체 및 대상, 절차, 환류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의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농촌계획협약과의 연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농촌다움(Rurality)’의 관점 하에서 여러 관계 부처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유인해야 한다.
 - 폭넓은 방식으로 농촌 실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다움’ 관점을 견지한 현장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제3차 기본계획의 부문 및 하위 정책군 구성 내용을 재검토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중점 부문과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 주민 수요가 높고 중요도가 큰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2019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향후 추진할 삶의 질 향상 역점 과제 예시>

정책 부문	정책군 내용	역점 과제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 ◆ 농어업인 직업질환 대응 전문 진료기관 운영 ◆ 농어촌 특화형 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생활 복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인력 확대 ◆ 취약계층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연계형 공동생활홈 조성 ◆ 농어촌 마을 복지 돌봄이 고용 지원 ◆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교육	농어촌 교육여건 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 지원 강화 ◆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 주민 평생교육 및 노인 문해교육 지원
정주생활기반	정주생활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 주민 난방비 절감 지원 ◆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일자리	청년 정착과 농어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영농 활동 지원 ◆ 청년의 농업 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 청년의 농어촌 주택 구입·임대 지원
문화·여가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영화관 등 농촌형 문화·여가시설 ◆ 찾아가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 주민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환경·경관	환경·경관 보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 ◆ 축산분뇨 처리·재활용과 축산악취 저감 ◆ 마을·지역단위 폐기물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안전	재해·범죄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응급 출동 및 즉시 대응 능력 강화 ◆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 주민 자율 재해·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 개요

-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의 최소 수준을 충족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세부 내용, 항목별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하였다.
 -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5년부터는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고, 9개 시·도 연구원이 광역자치단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있다.
 - 지자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를 원활하게 점검·분석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 연구원 간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중이다.

❖ 주요 추진 내용

▣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이다. 따라서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 현재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중기 목표치를 현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년~2019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향후 5년 동안의 기준치(baseline)로 삼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7개 분야 17개 항목(22개 세부기준)에 대해 통계청 승인 공표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29개)를 활용하여 점검·분석을 실시하였다.
 - 해당 자료는 자료 수집 기간 당시(2018년도 9월~1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되,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 통계를 사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공식통계 행정조사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물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공식통계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지자체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협조자료 행정조사

II. 2018년 주요 업무 내용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 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 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수 / 총 건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 분석 결과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응급서비스와 노인 항목의 달성률이 상승하였다.
 - 통계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노인 항목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서비스 항목은 2016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영유아 항목은 작년과 달리 소폭 감소하였고, 응급서비스 항목은 소폭 증가하였다.
- 교육 부문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감소하였다.
 - 전국 농어촌 읍·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둘 다 유지하고 있는 읍·면 비율은 70.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약 60%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비율은 감소 추세를 꺾고 2017년 대비 0.6%p 높은 20.4%로 집계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기준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상수도, 난방 항목은 기준 달성률이 전년에 이어 소폭 향상되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어 3.4%p 증가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부문은 기준 달성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문화·여가 부문은 소폭 감소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2017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소폭 감소하였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은 소폭 증가하였고,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매년 꾸준히 달성률이 향상되었다.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하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방법설비 항목은 기준 달성률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반면, 소방 출동 항목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 경찰 순찰 항목은 작년에 이어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2017년 대비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총 17개 항목 중 향상된 항목 수는 10개, 하락 4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은 3개로 나타났다.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7	2018	'17'18 증감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1.7	71.0	↘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8.6	99.4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1.1	81.5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6	69.0	↘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70.2	70.3	↗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18.9	20.4	↗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71.3	72.9	↗
	9)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60.0	63.1	↗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88.6	92.0	↗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96.4	완료	-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75.4	73.2	↘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1.3	93.5	↗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7	2018	'17'18 증감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2.0	82.9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 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9.3	53.6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4.6	18.8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기준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 진료서비스, 영유아, 경제활동의 3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다.
-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 전년 대비 군 지역의 이행실태가 다소 저하되었다.

- 군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와 영유아, 경제활동의 3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도농복합시는 모든 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 도농복합시에 비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의 비율도 현저히 낮아 군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137개)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44	43	55	55	99	98
	2) 응급서비스	49	57	55	56	104	113
	3) 노인	14	43	5	32	19	75
	4) 영유아	32	30	31	31	63	61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1	11	9	9	20	20
	6) 평생교육	8	8	12	12	20	20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	-	-	-	-	-
	8) 상수도	16	19	23	24	39	43
	9) 난방	9	15	24	25	33	40
	10) 대중교통	0	-	1	-	1	-
	11) 광대역통합망	70		48		118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56	53	48	48	104	101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3	74	53	55	126	129
6. 환경·경관	14) 하수도	7	9	31	31	38	40
7. 안전	15) 방범설비	31	42	13	15	44	57
	16) 경찰 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0	0	0	0	0	0

- 주 1)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2) 응급서비스의 경우 소방서가 입지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117개 시·군 대상).
 3) 난방 항목은 읍 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4)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데이터 부재, 광대역 통합망은 관련 사업 종료로 점검 불가능함.

□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목표 달성률이 높다.
 - 부산시 기장군은 노인과 초·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목표 달성률이 낮다.
 - 대구시 달성군은 방범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울산시 울진군은 방



- 범설비와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목표 달성률이 높다.
- 반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전체 13개 항목 중 8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목표 달성률이 낮다.
- 경기도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방 출동 항목을 제외한 12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목표 달성률이 높다.
- 평생교육 항목과 위에 언급한 3개 항목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이행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강원도는 총 7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수준이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등 총 7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체 평균보다 저조하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의 이행 실태가 저조하다.
 - 반면 노인, 교육 부문은 타 시·군 보다 이행실태가 높다.
- 충청북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1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높다.
- 초·중학교, 상수도, 경제활동,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높다.
-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와 같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1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초·중학교, 상수도, 난방, 하수도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낮으나 응급서비스, 소방출동 항목이 9개 도 중 이행실태가 가장 높다.
- 전라북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수준이다.
-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 항목에서 9개 도 중에 목표 달성률이 가장 낮다.
 - 반면 상수도, 방법설비, 통학수단 제공 학교 비율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전라남도는 총 11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수준이다.
- 하수도 항목이 9개 도 중에 가장 낮으며 교육 일부 항목(초·중학교), 경제활동

부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 경상북도는 방법설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수준이다.
 - 경상북도는 9개 도 중에서 이행실태가 가장 저조하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이행실태가 매우 낮다.
- 경상남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낮다.
 - 경상남도는 교육 부문의 이행실태가 저조하며 특히 방법설비, 영유아, 초·중학교 항목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제주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수준이다.
 - 특히 노인,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안전 부문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낮다.
 - 환경·경관, 교육(초·중학교), 보건·복지(진료서비스, 영유아) 부문의 일부 항목은 9개 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조사·연구 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2. 삶의 질 심층연구

2.2.1.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2.2.2.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2.2.3.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비교하였다.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하였다.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장기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에 앞서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검하고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이슈에 맞추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일부 문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 둘째, 2018년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주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 셋째,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다.
 -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수행하였다. 조사·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은 도시 주민 949명, 농어촌 주민 2,203명으로 총 3,152명이다.
 -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와 온라인 조사(Online-survey)를 병행하였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4주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의향 등이다.
-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1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항목은 6개 항목을 추가하고 2개 항목은 질문을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척도를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더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기존의 10점 척도(1~10점)에서 11점 척도(0~10점)로 변경하였다.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input type="radio"/>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input type="radio"/>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input type="radio"/>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input type="radio"/> 주관적 웰빙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input type="radio"/>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input type="radio"/> 7대 부문별로 3~7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input type="radio"/> 이주 의향 <input type="radio"/>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민의 만족도 수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 때문이다.
 -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두 항목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수치가 동일하거나, 도시민이 더 높았다.
 - 올해 도시민의 행복감은 5.9점으로 작년에 비해 0.3점 하락하고, 거주하는 곳에

서의 만족감은 6.1점으로 작년에 비해 0.2점 하락하여, 작년에 비해 각각 0.1점씩 하락한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6.1점), 거주하는 곳에서의 만족감(6.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차이는 감소하였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한 도시민의 점수는 모두 6.5점인데 반해 농어촌 주민의 점수는 각각 6.2점과 6.3점으로 도시민이 모두 높았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격차가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0.6점,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0.3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그 격차 폭이 각각 0.3점과 0.2점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농어촌 주민의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수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올해부터 추가된 항목인 ‘현재의 마을 발전 정도’에 대해선 도시민은 6.2점, 농어촌 주민은 6.0점으로 조사되었다. 즉,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에 비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차이는 감소하였다.

<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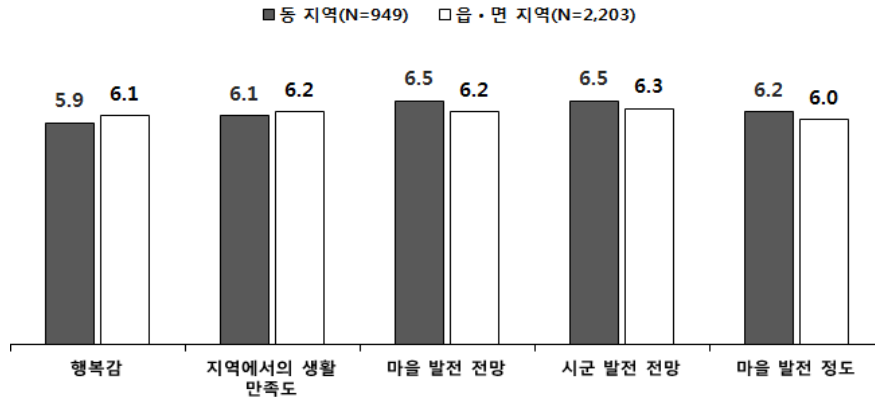
(평균 점수)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사군 발전 전망			(신규) 마을 발전 정도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8
도시 지역(동) (N=949)	6.4	6.2	5.9	6.6	6.3	6.1	6.8	6.7	6.5	6.9	6.8	6.5	6.2
농어촌 지역(읍·면) (N=2,203)	6.4	6.2	6.1	6.5	6.3	6.2	6.0	6.1	6.2	6.4	6.5	6.3	6.0
도농 차이 (농어촌-도시)	0.0	0.0	0.2	-0.1	0.0	0.1	-0.8	-0.6	-0.3	-0.5	-0.3	-0.2	-0.2

주: 2016년, 2017년 조사는 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0~10점 부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1점 척도)



○ 작년부터 도입된 주관적 웰빙 조사⁴⁾ 결과,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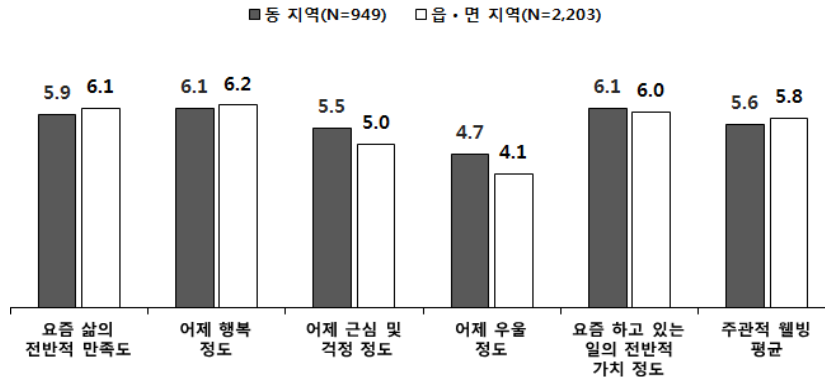
-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어제 행복 정도’에 대해선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 반면 ‘요즘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근심 및 걱정, 우울감에 대한 문항에서는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에 비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2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재산출한 후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했다⁵⁾. 그 결과 도시 주민의 평균값은 5.6점, 농어촌 주민의 평균값은 5.8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관적 웰빙 조사는 2017년부터 정주만족도 조사에 도입되었는데, 농촌 주민의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조사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주관적 웰빙’과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지수를 산출한다.

5)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3번과 4번 문항의 답변을 역코딩하여 ‘주관적 웰빙’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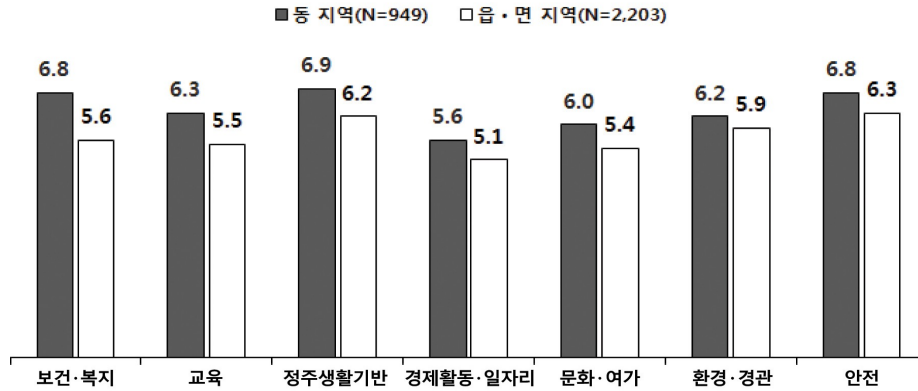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모든 부문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순이었다.
-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큰 부문은 안전(6.3점), 정주생활기반(6.2점) 순이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경제활동·일자리(5.1점)였고, 문화·여가(5.4점), 교육(5.5점), 보건·복지(5.6점) 부문도 전체 부문 평균 점수인 5.7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작년과 비교하여 만족도 평균 점수가 증가한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 유일하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은 작년에 비해 만족도 평균 점수가 0.4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 11점 척도)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의 변화>

(단위: 점)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건·복지	5.1	5.9	6.0	6.0	5.6	6.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6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5.5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1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신규문항>
						5.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교육	4.5	5.5	5.4	5.9	5.5	5.7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5.7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II. 2018년 주요 업무 내용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2	5.3	5.2	5.5	5.3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	-	6.3	5.8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2018년 학교 교육 여건 세부 문항 해당-평균점수에서 제외>
		-	-	-	6.2	5.8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018년 학교 교육 여건 세부 문항 해당-평균점수에서 제외>
		-	-	-	-	5.4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2018년 신규문항>
정주생활기반	4.8	5.3	6.5	6.4	6.6	6.6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4.5	5.8	6.1	6.3	6.3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4.5	6.1	6.0	6.4	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4.9	5.7	5.8	6.0	5.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	6.7	6.9	6.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	5.8	5.9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경제활성·일자리	3.9	3.7	4.6	4.8	5.0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0	4.9	4.9	5.3	5.2 최근 1년간(2018년-'3년간'으로 변경)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3.9	4.8	4.8	5.0	5.2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	-	-	-	5.1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	-	-	-	5.0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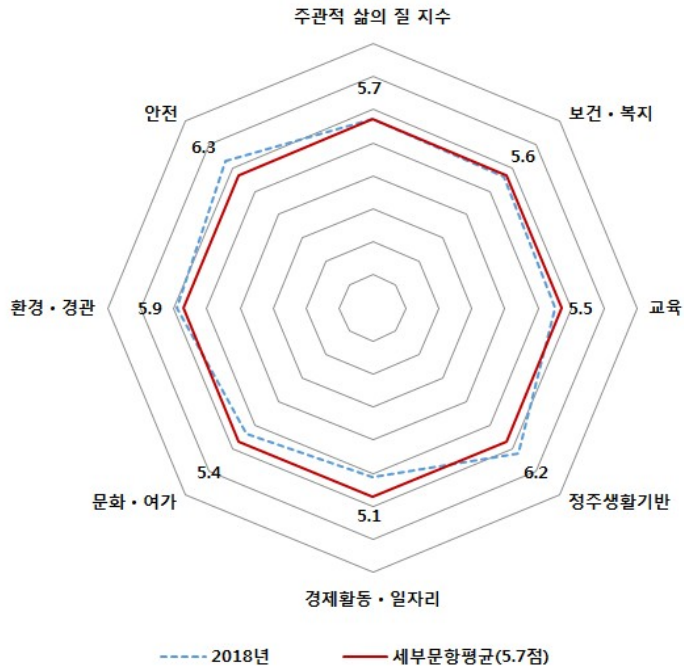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여가	2.9	3.3	4.7	4.8	4.7	4.8	5.0	5.1	5.4	5.4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5		4.6		4.5		4.8		5.3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		5.2		5.6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		-		-		-		5.1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깨끗하고 안전한	5.3	5.2	5.9	6.3	5.8	6.2	5.9	6.3	5.9	6.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		5.0		5.1		5.9		5.3	5.6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4		6.4		6.2		6.2		5.9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5.9	6.1	6.6	6.7	6.5	6.7	6.6	6.8	6.3	6.6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5.7		6.3		6.4		6.5		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5.8		6.8		7.0		7.0		6.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		6.4		6.7		6.3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		5.9		6.2		6.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		-		-		-		6.0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2018년 신규문항>	
전체	4.6	5.6	5.6	5.8	5.7	(전체 평균)						

주: 2014년,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한 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7 점으로, 작년에 비해 0.1점 하락했다.

<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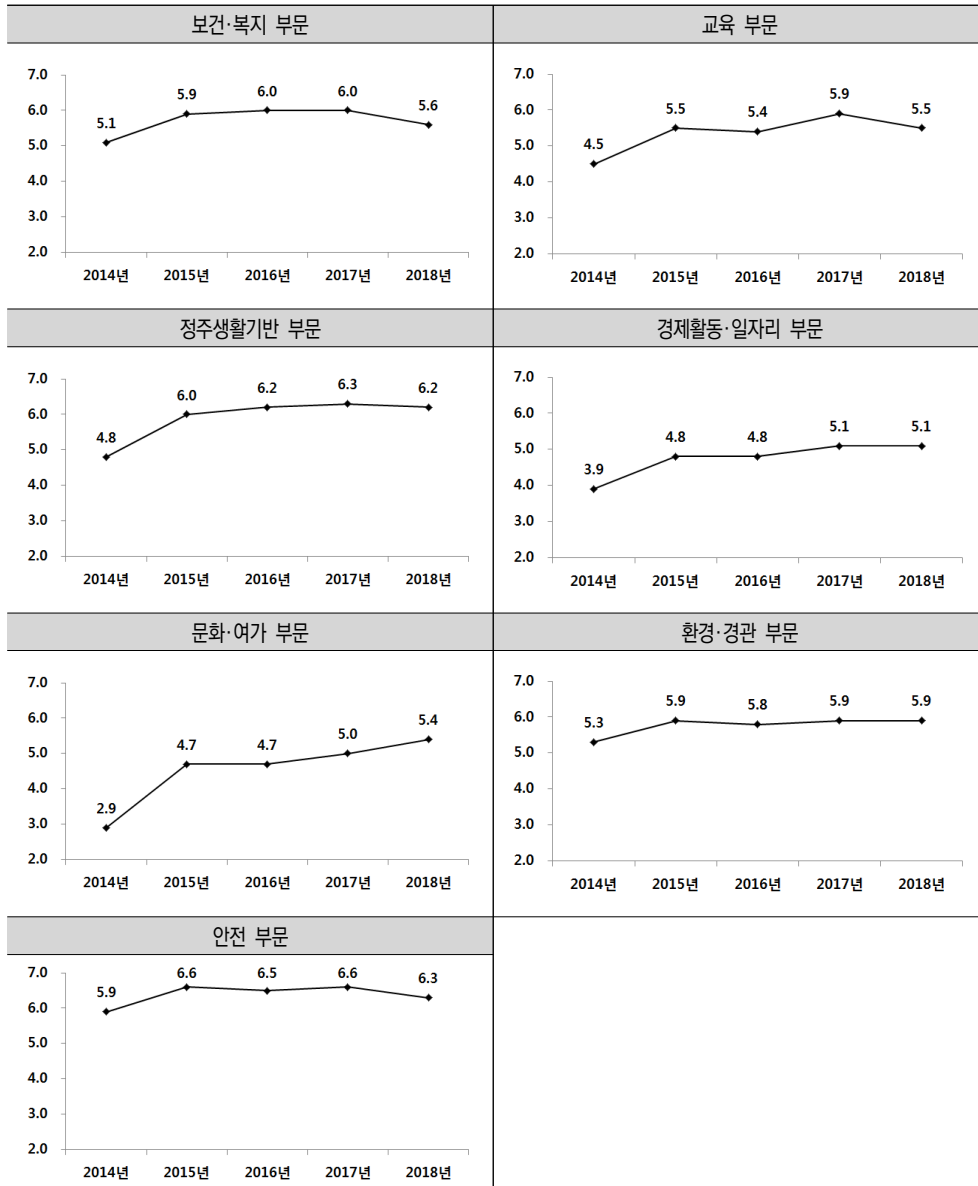


□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2014년~)

-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7년까지는 환경·경관 외의 6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안전 부문이 하락하였다.
 - 2014년부터 상승 추세이던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의 평균 점수는 2018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꾸준한 상승세이며,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지속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 변화 추이>



주1: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4년과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 소결 및 시사점

- 전반적인 삶에 대해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 5년 전 조사 결과에서는 도시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가 역전되었다.
 - ‘행복감’, ‘거주하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감’, ‘시·군 발전 전망’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민에 비해 그 하락 폭이 적었다. 특히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2018년 주관적 웰빙 지수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지수가 도시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여전히 농어촌 주민 중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50.4%) 중 과반수 이상이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도시 지역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해당 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
 -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도·농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인구특성별 분석에서 보면, 20~30대의 젊은층, 농림어업종사자, 귀농·귀촌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에 비해 20~30대의 젊은 층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젊은 층에게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에게도 농어촌 지역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으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또한 농림어업종사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



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였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간의 만족도 격차가 5년 사이에 커진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이 특히 농어촌 여건 중에서 의료 서비스 여건을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농어촌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학생교육과 관련된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특히 학부모 연령인 20~30대의 만족도는 4년 사이에 하락하기도 했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평생 학습 기회’였다. 특히 20~30대와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젊은 세대는 직업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게 되는 평생교육은 경제활동과도 직결되는 만큼, 교육 이수 후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려 노력해야 하며, 청년층 및 귀농·귀촌인 대상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을 열악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20~30대, 귀농·귀촌인, 농림어업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그룹은 농어촌 지역에 소득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종사자들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농어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동시에, 농어업인 외에 농어촌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자원

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항목만이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주민 주도의 문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여건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다.
 - 도시에 비해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선 주민 주도의 문화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문화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2. 삶의 질 심층연구

❖ 개요

- 삶의 질 심층연구는 2015년 구축한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전문 분야별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해왔다.
 - 농어촌 삶의 질 7대 부문인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생활안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성과 및 파급 효과 분석, 신규 과제 발굴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의 실태를 구체적인 통계 및 현장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 정책 추진 실태의 분석 대상은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을 참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8년 심층연구는 당해 수행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종합평가와 연동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삶의 질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 개선 방안, 시의성 있는 신규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2018년 심층연구 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제목
충북연구원	원광희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충남연구원	윤정미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

2.2.1.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 (배경) 최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농어촌 버스업체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농어촌의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운전직 종사자들의 연쇄 이동 및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배차시간의 확대 → 벽지노선 폐지 → 전체적인 농어촌 버스노선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어촌 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경우 현 버스 운전직 종사자의 약 50-60% 정도 신규 운전직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준공영제 시행으로 직업안정성이 높은 특·광역시로 운전직 종사자의 급격한 이직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운영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버스는 노선별 배차간격의 확대 → 노선 축소 및 폐지로 인해 농어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존 운영방식인 운수업체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교통서비스 사업 또한 운수업체의 여건 악화로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주요 내용)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인 농어촌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안적 운송수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적 교통서비스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 및 대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가능 대안	추진 여부
이 용 자	교통수단 선택권 제한 및 대체교통수단 부재	- 서비스 공급확대(운행대수 등) - 운행체계 개선(탄력노선 운영 등)	- 공영 및 마을버스 도입 - DRT 운영체계 도입
	공급수준 기준치 미달 및 이동편의성 저하	- 서비스 공급확대(운행횟수 등) - 운행체계 개선(지·간선체계 등)	- DRT로 서비스 확대
	탑승객의 안전성, 편리성 배려부족	- 차량구조변경 - 노후차량 대체차	-
	요금부담 경감	- 단일요금제 시행 - 정기권, 쿠폰제 등 요금 다양화	-



사업자	재정투자 대비 서비스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 틈새시장 진출 - 부가수입 창출(영업범위 확대 등)	- 과감한 인수합병 추진
	수요대비 공급확대에 따른 운송비용 부담	- 차량소형화, 유휴인력 활용 등 - 세금부담 완화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 교통수단 도입
	틈새시장 대응력 부족	- 신규시장 진출방안 강구 - 면단위 순환차량 운행	- 고정형에서 유연형 운영체제로 전환
지자체	재정지원 부담	-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 - BIG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근거마련	- 성과에 기반 한 지원기준마련
	서비스개선 민원 발생	- 인센티브제도 도입 - 탄력적 서비스 제공 등	- 권리현장 제정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 (정책 제언)

- 지역여건을 감안한 최소 서비스기준을 제시한다.
 - 1) 공급자 중심의 노선선정 및 운영방식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비해 서비스가 제한 받는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 2)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정시정로형 운영패턴의 농어촌 버스에 대해 최소운행기준을 설정한 서비스 공급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 서비스 공급범위 및 규모의 설정이 필요하다.
 - 1) 농어촌 지역 주민은 통근·통학목적 외에는 중심지역까지의 방문 횟수는 많지 않다.
 - 2) 통근·통학 등 정시성을 요하는 경우 최종목적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비교적 시간제약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빈번한 간선노선까지만 수송하는 단말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적 관점에서의 농어촌 버스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이므로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2) 교통시설 확충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체계관리계정에 농어촌 교통서비스 운행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다.

2.2.2.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 (배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입했지만 삶의 질 위원회와 중앙부처, 도, 시·군 간의 서비스기준 제도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예산 등 실질적 정책수단이 없으며 제도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도 미 추진 시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실정이다.
 - 지자체 현황을 반영한 항목 선정과 도 시책을 통한 목표치 달성을 기대하였으나 서비스기준 시책 연계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다.
 -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가가 농어업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운영하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요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발전과정, 운영 실태, 공무원들의 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충청남도 및 해당 시·군의 삶의 질 정책 담당자 및 기획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지표가 너무 많고 지자체에서 이행을 제고할 수 없는 지표가 포함되는 등 점검 상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체계 등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 (정책 제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정부는 조직 정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1) 공모·신청 접수 단계에서 시·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대상사업의 평가 및 선정 단계에서 농어촌서비스 실태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취약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3)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취약한 농어촌서비스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평가를 실시한다.
 -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



영 조례 제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1) 초기에는 농정국내에 농어촌 삶의 질 T/F팀을 운영한 후 전담부서 설치로 확대할 수 있다.
- 2) 전담팀 및 부서 설치 후 반기별·분기별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주재의 정례회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하여 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 2)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의 제정과 항목·내용 구성, 기준 운용 방식, 조직 운용,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조례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2.3.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

- **(배경)** 노후주택, 공폐가 등 농촌의 열악한 주거 실정을 개선하려면 현행 주거실태 조사를 보완하는 농촌형 주거기준과 특수 목적의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도시적 주거 양식을 반영하고 도시 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농촌의 생활 환경과 주거 특성에 의한 농촌 주택의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취약한 농촌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연계가 없어 농촌 주거 생활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 **(주요 내용)** 농촌의 주거 여건을 파악해 농촌형 주거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 방안을 도출하고 주거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농촌 주택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농어촌 주거 관련한 핵심 이슈를 주민의 수요, 주택의 물리적 기능, 환경 요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농촌형 주거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화된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언)** 농촌형 주거기준은 국가가 농촌 주거 생활 개선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수단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농촌형 주거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항목(전용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식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의무기준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관련된 정책 수단이 정비되지 못했거나 새롭게 이슈로 부각된 영역은 권고기준으로 제시한다.
 -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농촌 주거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획협약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시·군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농촌 지역의 주거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현실에 입각한 주거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자율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2015년부터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홍보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 2018년 사례집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정주생활, 농촌 일자리, 문화·여가, 청년, 교육을 주제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추진 사례를 발굴·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 (대상 사례) 농촌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농민,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19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했다.
 -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홍보 방안) 우수사례를 소개한 사례집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각 사례들의 시사점을 부각시켰다.

❖ 주요 내용

▣ 농업인의 아픈 몸을 지역이 어루만지다: 곡성 농업인 재활센터

- (주요 내용)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시설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재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
- (키워드) 농부병, 근골격계 질환 재활, 농업인 재활센터

▣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바른협동조합

：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

- (주요 내용) 지역 출신의 청년 치료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지역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언어재활,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촌 일자리를 마련
- (키워드) 재활치료, 언어치료, 미술심리치료, 사회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 치매극복 열쇠는 ‘공동체’ 와 ‘이웃’ : 경북 치매보듬마을사업

- (주요 내용) 치매 환자나 인지력이 저하된 주민들을 거주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이 돌보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북 치매보듬마을사업 및 의성군 치선마을 사례 소개
- (키워드)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보듬마을, 주민참여, 인식개선, 사회공헌

▣ 마을 가꾸기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다

： 전남 순천 서당골 문성마을

- (주요 내용) 주민 자율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고 마을 환경정비와 소득사업을 실시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다시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
 - 자연자원 소득화, 생태 복원 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노력
 - 마을기업 설립하여 마을 주민들 일자리 창출로 월 소득 60~70만 원 제공 및 마을 정주여건개선 사업비 마련
- (키워드) 주민자율 마을환경정비, 마을발전계획, 6차산업



▣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기: 충북 증평 죽리마을

- (주요 내용) 노후주택과 공폐가가 늘어나는 죽리마을은 2014년부터 노후주택 개보수, 빈집 철거 등 마을정관가꾸기 활동을 시작. 빈집 소유주를 설득해 공폐가를 철거하거나 개량하여 주차장, 마을 편의공간, 귀농·귀촌인 주택으로 활용
- (키워드) 빈집 정비, 귀농·귀촌인 유입, 마을 유휴자원 활용

▣ 주민 스스로 개선한 농촌의 취약한 교통여건

: 강원 횡성 금광골영농조합법인, 전북 완주 동상안전협동조합

- (주요 내용)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조합을 설립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교통서비스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키워드) 농촌 교통, 주민 주체 운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 따뜻한 기술로 만드는 편리한 농촌생활

: 전북 완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 (주요 내용) 지자체가 지원하고, 다양한 경제주체가 협력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에 앞장서는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키워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완주군, 적정기술, 나는 난로다, 아궁이디자인 학교

▣ 부족한 농촌의 일손, 도시와 손을 맞잡다: 세종 푸마시

- (주요 내용) 일손이 필요한 농장과 일자리를 구하는 도시민 사이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장주와 농작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농장코디네이터 양성
- (키워드) 일자리, 인력중개, 농장코디네이터

▣ 혼자서는 어려운 수출길, 협동하고 뚝치면 길이 보인다

： 충남 금산 금산진생협동조합

- (주요 내용) 지역 내 15개의 소상공인 조직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고, 국제마케팅조직을 공동 운영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차별화에 성공. 10여 개 국가에 100만 불 이상의 금산인삼 제품을 수출
- (키워드) 백삼, 금산, 금산인삼, 금백, 에너지, 진흙

▣ 척박한 땅을 일궈 지역의 명소로: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 (주요 내용) 제주 젊은 농부들이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 메밀, 라벤더 등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축제와 관광, 농산물 가공판매 등 6차산업화를 추진,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키워드) 경관농업, 관광, 6차산업

▣ 지역자산을 활용한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

： 강원 평창 미탄주민주식회사

- (주요 내용) 미탄면 주민들이 주민주식회사를 설립,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
- (키워드) 동강 래프팅, 백룡동굴 체험관, 민물고기 생태관

▣ 농촌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들

：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 (주요 내용) 청년문화가 기반인 워킹홀리데이로 농업을 재해석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과 농산물 창구 역할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키워드) 워킹홀리데이, 알뜨르농부시장, 청년



▣ 주민이 주도하면 관광사업이 달라진다: 전북 남원시관광협의회

- (주요 내용) 전통문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공연 프로그램에 배우로 참여해 지역 유명 콘텐츠로 거듭났으며, 관광협의회를 운영해 관광 활성화
- (키워드) 광한루와 남원루, 춘향테마파크, 신관사또부임행차

▣ 도시청년 농촌에 활력 불어넣다: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 (주요 내용) 지방이 겪는 일자리 부족과 지역쇠퇴라는 복합적 문제를 새롭게 풀어 내는 경상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소개
- (키워드) 지방소멸, 청년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도시청년 시골 파견, 지자체 간 연대

▣ 청년 농부들의 유통혁신 : 전남 지오쿱협동조합

- (주요 내용) 전남 청년농업인들이 농산물과 가공품 유통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내부 소통과 역량 강화로 농촌 청년의 어려움을 극복
- (키워드) 농촌, 청년농업인, 농식품 유통플랫폼, 유통협동조합

▣ 토종 홉으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용오름 맥주마을협동조합 : 강원 홍천 용오름마을

- (주요 내용) 귀촌청년들을 중심으로 홍천 홉을 이용한 수제맥주와 홉 관련 제품 생산 협동조합 운영
 - 마을 체험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여행 프로그램 운영, 홉 농업, 홉 관련 제품개발
- (키워드) 홉 재배, 수제맥주, 농촌 관광, 청년 협동조합

▣ **함께여서 더 행복한 덕산초중학교: 충북 제천 덕산초중학교**

- (주요 내용) 농어촌지역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와 성과 및 한계점 제시
 - 덕산초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
- (키워드) 제천시 덕산면, 교육과정 연계, 통합운영학교

▣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농촌유학
: 강원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 (주요 내용) 마을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만든 공부방을 시작으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거쳐 유학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토대로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인가
- (키워드) 농촌유학, 산촌유학, 별빛교육센터, 사회적기업

▣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학교: 경북 김천 디딤돌학교**

- (주요 내용) 문해교육기관이 절실하던 대덕면에 정규학교 시설 및 교원을 활용한 면 단위 학력 인정 학교인 디딤돌 학교를 개설해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준 1면 1문해 학교 연구사업
- (키워드) 김천 대덕초, 디딤돌학교, 성인문해교육, 1면 1문해 연구학교



3. 기타 삶의 질 위원회 지원 업무

-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3.2.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3.3.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3.4.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3.5.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대응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18년 12월 19일 (수)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발표 내용
 -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정책
 - 2)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서비스
 - 3) 마을 사례로 살펴 본 농어촌 주택 실태와 향후 개선 과제
 - 4) 미래의 농부를 찾아서 키우는 푸마시
- 참석 인원: 150명

행사 일정

시간	주제	발표자
13:30 ~ 14:00	등록	
14:00 ~ 15:00	개회식	장광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최재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장
15:00 ~ 15:30	주제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과 포용적 복지정책 - 강연: 최재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15:30 ~ 16:00	주제 2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와 과제 - 강연: 최재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16:00 ~ 16:30	주제 3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서비스 - 강연: 최재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16:30 ~ 16:45	주제 4	마을 사례로 살펴 본 농어촌 주택 실태와 향후 개선 과제 - 강연: 최재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16:45 ~ 18:00	폐회식	최재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오시는 길

대한상공회의소 (151-707) 151-70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4F (40101)
전화: 02-2619-1214

행사장 위치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4F (40101)
전화: 02-2619-1214

주요 행사 일정
12월 19일 (수)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 (2층)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농촌정책팀) | 전화: 02-9402-2007 | e-mail: jpr9402@krdl.go.kr



❖ 주요 내용

- 현장에서 시도해온 혁신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할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을 점검하였다.
-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 주제발표, 사례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 주요 토론 내용

<포용사회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포용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버전이다.
 - 포용에는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포용이 있다.
 - 경제적 포용은 소득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을 포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포용은 노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계층을 포용하는 것이고, 공간적 포용은 소외된 공간을 포용하는 것이다.
- 공간적 포용은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4차산업혁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ICT, 스마트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사회 정착>

- 농촌의 인구 변화는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인구 변화의 흐름이 있다.
 -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진 시점에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청년 보금자리 지원, 유희시설을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거주자를 위한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
 - 삶의 질 개선이 일자리 수와 사업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 귀농·귀촌정책이 많지만 사실상 귀농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다.
 - 귀농·귀촌인구 50만 명 중에 귀농인구는 1%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귀촌인인데 이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다. 이는 내년도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새로 유입되는 청년층에게 단순히 일자리 제공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교육과 보육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생활서비스 전달과 삶의 질 추진 체계 개선>

-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간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단체마다 거점과 마을의 생활 서비스 수준, 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사업비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방정부가 단위별로 분절돼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융복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도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농산어촌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지자체에서 농촌에 적용되는 ICT 융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 농림어업 종사자, 사업체의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 지자체가 수요에 응답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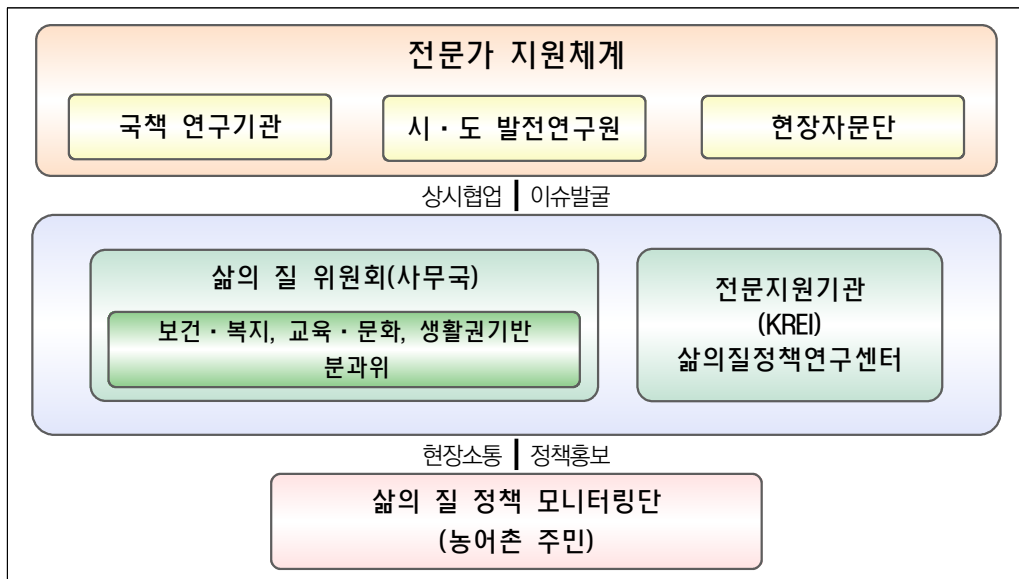


3.2.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교사, 사회복지사, 공중보건기사, 구급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각 일원이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연구원, 9개의 시·도연구원,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53명),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13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내용

▣ 현장자문단 운영

○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배경	- 서비스 전달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제시 - '현장자문단' 조직을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출 범	- 2015년 7월 21일 출범식(서울 양재동 aT 센터) - 정책모니터링단(KREI 리포터)과 함께 현장네트워크 구성
조직구성	-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 - 보건·복지 분야 14명, 교육 분야 9명, 정주생활기반 4명, 경제활동·일자리 8명, 문화·여가 8명, 환경·경관 4명, 안전 6명
운영 시스템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운영
성과 관리	- 연구자문 및 이슈 발굴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대토론회에 의견 제시

▣ 정책지원 네트워크 공동 연구 진행

- 정책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국책·시도연구원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업 및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심층연구 주제 및 연구기관>

제목	연구기관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충남연구원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서비스 운영 방안	충북연구원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참여 연구기관>

핵심 항목 점검부분	연구기관
2018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강원발전연구원
2018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충북연구원
2018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2018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전북연구원
2018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대구경북연구원
2018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경남발전연구원
2018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제주발전연구원



3.3.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개요

- 삶의 질 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다.
 - 삶의 질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보건·복지, 교육·문화,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삶의 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과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 분야별 토론·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2018년에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제시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서면을 통해 개최하였다.
 - 일시: 2018년 12월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안건: 농촌 분만 환경 개선 방안,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 전문지원기관은 농촌 분만환경 개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대한 농촌 복지 여성과의 안건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안건별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4.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개요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를 겪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현실과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켜 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축적된 조사연구 내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 지자체 공무원, 지역 활동가, 농업·농촌관련 연구자에게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발간된 포스터는 각 시·군 삶의 질 담당부서, 공무원, 삶의질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 2018년 7월 1호를 시작으로 4호까지 발간하였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호: 농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2018.07)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2호: 청년, 농촌에서 즐거운 삶을 꿈꾸다.(2018.08)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3호: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학교(2018.10)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4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서 시작한다.(2018.12)



❖ 주요 추진 내용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호

○ (제목) 농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 (구성)

- 농촌의 인구 변화
- 농촌 청년 인구 변화
- 농촌의 인구 구성

○ (내용) 농촌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다문화 가정, 여성, 귀농·귀촌인’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 최근 농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이지만, 귀농 가구, 외국인 등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엔 농촌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2호

○ (제목) 청년, 농촌에서 즐거운 삶을 꿈꾸다

○ (구성)

- 인구 수 변화
- 정주만족도
- 농업활동
- 청년 귀농·귀촌인
- 청년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도전 사례

○ (내용) 20세~39세의 농촌 청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농촌은 그동안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곳, 청년

들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여겨졌다.

- 농촌의 청년 인구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왔고, 여전히 농촌 청년들의 70%는 도시로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귀농·귀촌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3호

○(제목) 없어서는 안 될 농어촌 학교

○(구성)

- 농어촌 학령기 아동(8-13세) 인구의 감소
- 농어촌 학교는 소규모화되고 통폐합되고 있다.
- 농어촌의 교육 여건은?
- 교육 여건을 개선한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증가

○(내용) 농어촌 초등학교의 실태를 재조명하였다.

- 농어촌의 지속적인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가 심화되고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전원학교 육성, 작은 학교 살리기, 1읍·면 1개 초등학교 요지 등 농어촌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4호

○(제목)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서 시작한다.

○(구성)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시설 접근성과 교통개선의 필요성
- 농어촌 주민의 교통수단
-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만족도
- 농어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여건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 효과
 - '19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대응
- (내용) 농어촌 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현재 교통여건은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 보았다.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은 이동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등 복지차원의 보완적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운수업체에 적용되면 농어촌 버스의 노선 수 및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농어촌의 교통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5.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대응

❖ 개요

- 제4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및 제21차 농촌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각국의 농촌정책 수립 동향을 파악하였다.
 - 회의 일정: 2018년 11월 6일(화) ~ 11월 8일(목)
 - 회의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컨퍼런스 개최 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공동 대응하고, OECD 사무국과의 협의를 지원하였다.
 - OECD RDPC 사무국에 한국의 농촌발전 및 삶의 질 정책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고, 2019년 컨퍼런스의 전체적인 주제와 세부 세션 운영 방향, 한국과 OECD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주요 내용

- 농촌 지역의 메가 트렌드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요 농촌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촌의 메가 트렌드로서, 인구학적 변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및 신생산혁명(new production revolution), 글로벌 경제 변동, 투자 환경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 농촌 지역개발 분야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도시와 농촌 간 정책 연계를 통한 협력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농촌의 당면한 이슈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전달 관련 문제,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삶의 질 서비스 수요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농촌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중에서도 특히, 지역 고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의 변화가 가져올 위험의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 새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2006년) 및 농촌정책 3.0의 연장선상에서 농



촌 헌장(Rural Principle)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서 농촌 발전 정책의 방향,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의 관리, 공공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효율화 방안,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를 OECD 회원국에 소개하고, 방문을 요청하였다.

- 제12차 한국 컨퍼런스에서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 청년의 이주 및 커뮤니티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농촌 지역의 웰빙과 경제적 번영 아젠다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농촌 젊은 세대의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0차 OECD RDP 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주요 내용
11월 6일(화)	<p>■ 제21차 농촌작업반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30~10:0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10:00~11:00 / 농촌정책3.0: 농촌지역의 혁신 - 11:30~12:15 / 관계부처 회의 - 12:15~13:00 / 토착커뮤니티 - 14:30~15:15 /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교육 부문 - 15:15~16:00 / 지역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멕시코 히달고 지역, 스웨덴 스말란드-블레킹
11월 7일(수)	<p>■ 제40차 RDP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30~10:15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10:15~11:00 / 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 11:30~13:00 / 도시 및 농촌 정책에 OECD 원칙 반영 - 14:30~15:30 / 지역 실태 - 16:00~18:00 / RDP 관계부처 회의 및 관련 선언문 채택
11월 8일(목)	<p>■ 제40차 RDP 회의(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30~10:45 / 탈중심화 과제 설정 - 10:15~12:00 / 효율적 공공투자에 대한 위원회 제언의 모니터링 보고서 - 12:00~12:30 / 교통 및 지역 개발 - 12:30~13:00 / 미래 과제 준비 - 14:30~15:45 / 산업 재편 관리